

농업 현장 사업자를 위한 형사법 강의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의 핵심 이해와 실제 대응

법무법인 연 | 대표변호사 우석환

강사 소개



| 법무법인 연 대표변호사 우석환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졸업
- 제44회 사법시험 합격, 제36기 사법연수원 수료
- 광주지방법검찰청 순천지청 검사
- 전주지방법검찰청 정읍지청 검사
- 광주지방법검찰청 검사
- 중앙노동위원회 차별시정담당 공익위원

강의 목표

사고 유형 이해

- 농업·축산업·수산업 현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고의 유형 이해

법적 책임 숙지

- 산안법·중대재해법의 처벌 구조, 의무 범위, 최근 판례 이해

실전 대응 능력

-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한 사전 대비와 사고 후 대응 절차 숙지
- "고용주가 절대 하면 안 되는 말·행동" 파악

개 요

01

농업 현장의 법적 위험 개관

- 농업의 특수 위험요소
- 최근 3년간 농업·임업·어업 사고 통계
- 사고 한 번 = 형사·행정·민사 3중 책임

03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범위 및 핵심 의무

-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여부
- 처벌 구조
- 처벌 수위

05

산재·중대재해 발생 시 대응 로드맵

02

산업안전보건법의 기본 구조

-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법의 차이
- 산업안전보건법의 기본 개념
- 사업주의 핵심 의무
-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시 처벌

04

실제 농장 사고 사례 분석

- 사례 1. 경운기 PTO 회전부 끼임 사고
- 사례 2. 비닐하우스 고소작업 중 추락 사고
- 사례 3. 축사 분뇨저장조 질식사고

06

사업주 체크리스트

01 농업 현장의 법적 위험

① 농업 현장의 특수 위험요소

농기계 사고

트랙터·경운기·콤바인 협착,
전복, PTO 끼임 사고

밀폐공간 위험

축사 밀폐공간(분뇨저장조·환기 미비)로
인한 질식 위험

고소작업 추락

비닐하우스 작업 중 추락 및
감전 사고

화학물질 노출

농약·약품 취급 시 화학물질
노출 위험

계절근로자·외국인근로자 관리

계절근로자와 외국인 근로자 증가 – 통역과 안전교육이 미흡할 경우 법적 책임 가중
▶ 근로기준법과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형사책임 발생 가능



② 최근 3년 간 농업 사고 통계

100+

연간 사망자 수
매년 100명 이상이 농업·
임업·어업 사고로 사망
(통계청·고용부 기준)

50%

농기계 사고 비중
전체 사고의 절반 이상이
농기계 관련 사고

↑

외국인 근로자 증가
외국인 근로자 비중이 증가
하면서 통역, 안전교육,
사업주의 법적 책임 증가

③ 사고 한 번 = 3중 책임



형사 책임

산안법 위반, 중대재해법 위반, 업무상과
실치사로 형사처벌



행정 책임

과태료 부과, 작업중지 명령,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



민사 책임

손해배상 등 금전적 책임(억 단위 가능성)

02 산업안전보건법의 기본 구조

①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의 차이

산업안전보건법

안전규정을 지키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기본 안전법

- 구체적 안전기준과 의무 규정
- 위반 시 행정처분(과태료, 작업중지)
+ 형사처벌(벌칙)
- 예방적 성격의 법률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재해가 실제로 '발생한 뒤' 경영책임자에게 처벌을 부과

- 결과 발생 시 처벌 (사망·중상·직업병)
- 위반 시 형량을 크게 올려 사업주가 미리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도록 강제
- 사후적 처벌 중심

적용 대상의 차이

항목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업장 규모	1인 이상 모든 사업장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농업·축산업	원칙적으로 적용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이면 제외
피해 범위	모든 사고·질병	사망 1명 이상, 중상 2명 이상

❏ **중요** : 농업 현장도 상시근로자 1명만 있어도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처벌 대상의 차이

산업안전보건법

처벌 대상 : 사업주,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법인

사망 사고 시 : 최대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중대재해처벌법

처벌 대상: 경영책임자 (대표 등 최고 책임자)

사망 사고 시 :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
(하한 있는 실형 가능)

법인 : 50억 원 이하 벌금

즉, 중대재해처벌법은 사고 발생 시 사업주나 대표가 직접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법

② 산업안전보건법의 기본 개념



목적

"근로자의 안전·보건 확보"



핵심 의무 부과

사업주에게 부과되는 12개의 핵심 의무



적용 사업장 규모

농어업에서 분야 또한 상시근로자 1명만 있어도 적용





③ 사업주의 핵심의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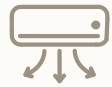
(1) 안전조치

- 농기계에 안전장치 설치
- PTO(동력전달축) 보호덮개 설치
- 회전부 방호장치
- 고소작업 시 안전대·작업발판 설치

☐ 사례: 트랙터 전복 사망 사고 - ROPS 전복 방지 프레임 미장착으로 사업주 처벌

③ 사업주의 핵심의무

(2) 보건조치



환기 관리

비닐하우스와 축사의 환기



보호구 지급

농약·약품 취급 시 마스크, 장갑 등 적절한
보호구 지급 및 착용 관리



밀폐공간 관리

축사 분뇨저장조 등 밀폐 공간 작업을 금지하
거나 철저한 감독 하에 진행해야 합니다.

(3) 교육의무

1

분기별 정기교육

분기별 정기 안전보건교육 실시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온라인 교육

2

농기계 조작교육

농기계 조작자 교육 및 기록 보관

3

외국인 근로자 교육

통역 준비 및 모국어 교육 자료

4

교육 기록 보관

모든 교육 기록을 문서로 보관



(4) 위험성 평가

- ▶ 산업안전보건법 및 규칙, 고용노동부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 연 1회 이상



- 농장의 규모가 작아도 반드시 실시



- 위험성 평가 미실시 상태에서
사고 발생시 = 중과실

(5)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간단 버전)

- 농장은 대부분 "소규모사업장"이므로 간소화된 관리체계 구축 가능
- 법적 최소 요건 :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만 중대재해법 적용

1

안전보건 담당자 지정

현장 책임자를 안전보건 담당자로 지정하고 문서화

2

작업 전 점검표 작성

매일 또는 작업 시작 전 점검표를 작성하고 기록을 보관

3

즉시 보고 체계

기계·시설 이상 시 즉시 사용을 중지하고, 보고하는 체계 구축

④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시 처벌

기본 벌칙

위반 내용	처벌
안전조치·보건조치 미이행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교육 미실시	과태료 500만 원 이하
보호구 미지급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작업중지명령 불이행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사고 발생 시 가중(업무상과실치사 병합)

- 근로자 사망 시 : 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 있으면 동시에 처벌(이중 아님)

03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범위 및 핵심 의무

①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

아래 기준 충족 시 농업·축산업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됨

▶ 중대산업재해 기준

- 사망자 1명 이상
- 동일 사고로 전치 6개월 중상해 2명 이상
- 직업병 환자 3명 이상

▶ 적용 대상 사업주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 농가, 영농조합, 법인에서도 5인 이상이면 적용

② 처벌 구조 : 경영책임자의 4대 의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체계적인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실제로 운영



재해예방 예산 및 인력 확보

안전을 위한 충분한 예산과 인력을 배정



개선명령 이행

관계 기관의 개선명령을 즉시 이행



도급·용역·위탁 시 안전관리

외부 업체 이용 시에도 안전관리 책임을 다해야 함

☐ ※ 실제로 안전관리를 했다는 기록(증거)이 가장 중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소규모 간소화형)

▶ 문서 3종 정도면 충족 가능 → 총 3~4장 수준의 문서로 관리체계 구축 완성

1

안전·보건 담당자 지정

대표자 또는 현장 책임자를 지명(문서 1장)

2

작업 전 점검표 운영

농기계 점검 체크리스트, 고소작업·비닐하우스·축사 점검표 (주 1회 또는 작업 시작 전 기록 1장)

3

사고·고장 보고 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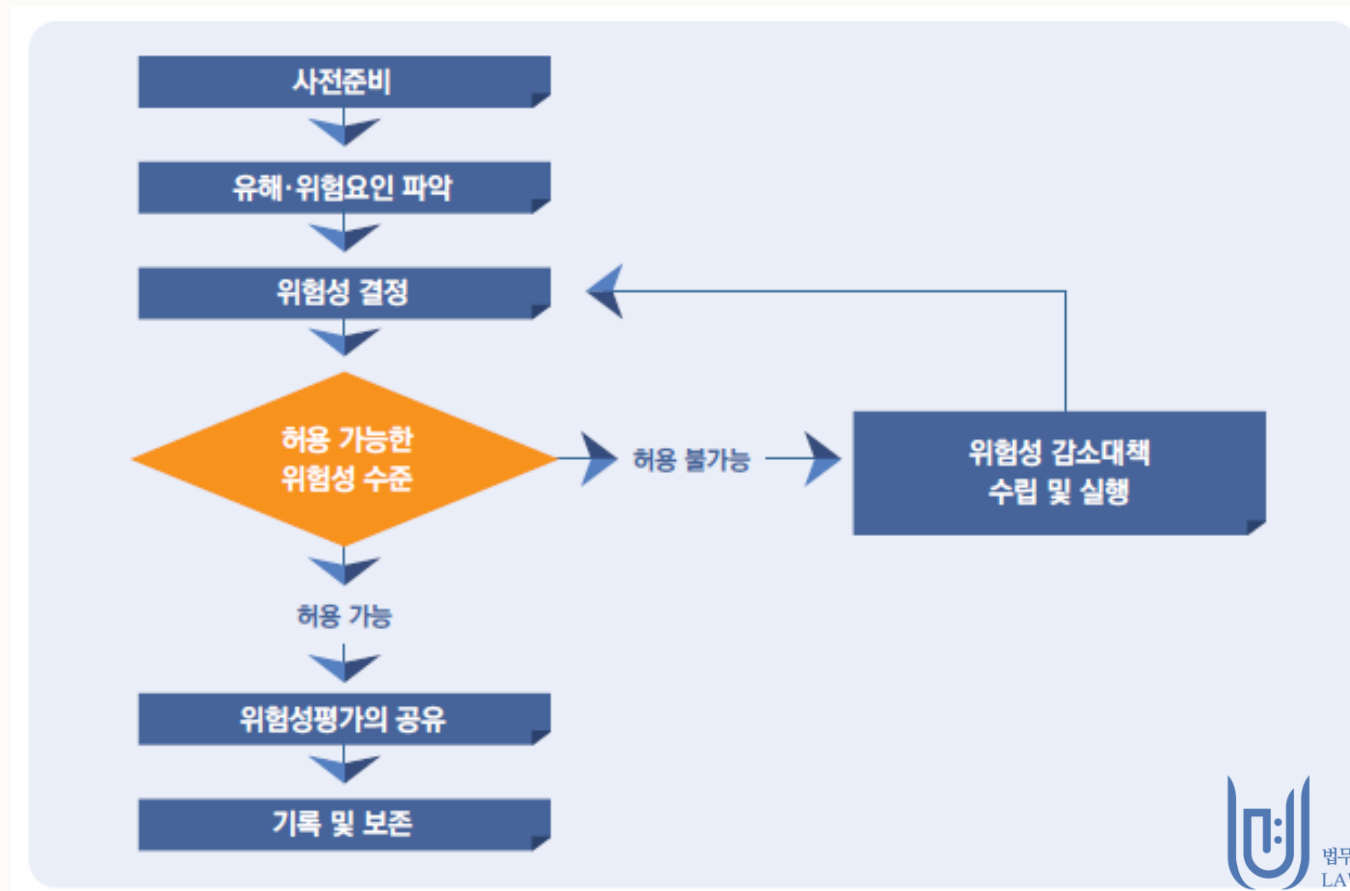
"문제가 있으면 즉시 보고 → 즉시 중지" 내부 규정(문서 1장)

위험성 평가(연1회 간소화형)

▶ 고용노동부에서 공개한 소규모 사업장용 “간편 위험성평가 방법 안내서” 서식자료 활용(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정책자료실 참조)

"어떤 위험이 있고 →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 A4 5~8장 정도로 작성하면 연 1회 평가 완료

【위험성 평가 절차 참조】



- 단계 01 사전준비**
위험성평가 실시규정 작성, 위험성의 수준 등 확정, 평가에 필요한 각종 자료 수집
- 단계 02 유해·위험요인 파악**
사업장 순회점검 및 근로자들의 상시적 제언 등을 활용하여 사업장 내 유해·위험요인 파악
- 단계 03 위험성 결정**
사업장에서 설정한 허용 가능한 위험성의 기준과 비교하여 판단된 위험성의 수준이 허용 가능한지 여부를 결정
※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3단계 판단법, 체크리스트법 등 간편한 방법 활용
- 단계 04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위험성의 결정 결과 허용 불가능한 위험성을 합리적으로 실천 가능한 범위에서 가능한 낮은 수준으로 감소시키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실행
- 단계 05 위험성평가의 공유**
근로자에게 위험성평가 결과를 게시, 주지 등의 방법으로 알리고,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 등을 통해 상시적으로 주지
- 단계 06 기록 및 보존**
위험성평가의 유해·위험요인 파악, 위험성 결정의 내용 및 그에 따른 조치 사항 등을 기록 및 보존

정기 안전보건교육(분기 1회)

▶ 고용노동부/안전보건공단에서 제공하는 무료 온라인 교육으로 갈음 가능



1회

분기별 교육

3개월마다 1회 실시



30분

교육 시간

유튜브 공식 영상 1개



1장

교육일지

간단한 교육일지 작성 및 서명

예산·인력 확보

- ▶ 대규모 사업장처럼 "안전관리 예산 수억 원 확보 " 를 의미하는 것은 아님(소규모 사업장에 적합한 수준의 예산 배정)

필수 안전 투자 항목

- 방호덮개 교체비용 마련
- 사다리·발판 구매
- 안전대·보호구 지급
- 노후 농기계 점검 비용

교육비

- 무료 온라인 교육을 활용하면 교육비 부담 없이 법적 의무 이행 가능

도급·용역 시 안전관리

외부 수리기사 작업 시

"위험요인을 설명"한 뒤, 설명서 또는 문자 1건을 남기면 충분

단기근로자(일용) 작업 시

"작업지시서와 안전교육" 문서 비치

☐ 간단한 문서 1장으로도 법적 의무 충족 가능

③ 중대재해처벌법 처벌 수위

대상	처벌
경영책임자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이하 벌금
법인	50억 이하 벌금
관리감독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별도 처벌

※ 경영책임자는 대표자뿐 아니라 실질적 운영자도 포함 (예: 농장주, 영농조합 대표, 축사 운영 실장 등)

04 실제 사고 사례 분석

- 사례 ① 경운기 PTO 회전부 끼임 사고
- 사례 ② 비닐하우스 고소작업 중 추락 사고
- 사례 ③ 축사 분뇨저장조 질식사고

사례 ① 경운기 PTO 회전부 끼임 사고(사망)

1

사고 경위

PTO 덮개가 파손된 상태로 작업을 진행하다가 회전부 끼임 사고 발생(사망)

2

법적 책임

안전조치 미이행 →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인정

3

경영책임자 과실

작업 전 점검 부실

4

처벌 결과

중대재해법 처벌은 면했으나 산안법 위반과 업무상과실치사로 처벌



사례 ② 비닐하우스 고소작업 중 추락사고(중상해)

사고 원인

사다리 고정 미비, 안전대 착용 관리 소홀

사업주 과실

"착용하라고 말만 함" - 실질적 관리 부재

불리한 증거

교육 기록 없음 → 사업주에게 불리한 증거

처벌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처벌

사례 ③ 축사 분뇨저장조 질식사(2명 사망)

밀폐공간 작업허가서 미작성

송풍 미 실시

가스 측정 미 실시

외국인 근로자 교육 미 함

중대재해법·산안법 모두 처벌

처벌 결과 : 법인 벌금 10억 원 → 폐업

05 산재·중대재해 발생 시 대응 로드맵

① 사고 발생 즉시



119 신고

: 즉시 응급구조 요청



기계 정지 및 현장 보존

: 추가 사고를 방지하고 증거를 보존



2차 사고 방지

: 다른 근로자의 안전 확보



관계 기관 신고

: 경찰·고용노동부에 신고(사망·중상해 24시간 내)

② 조사 대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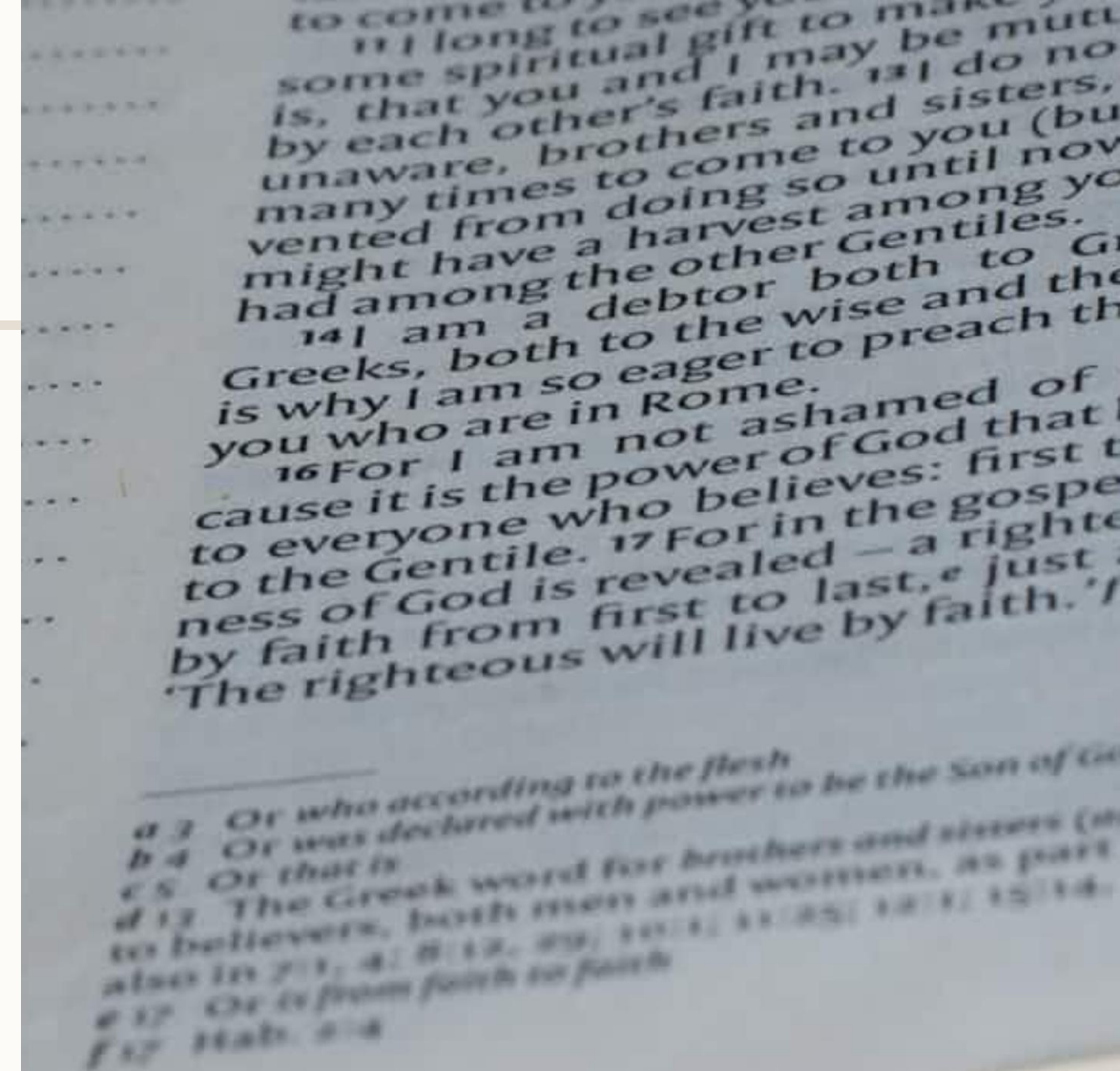
법률 전문가 선임

변호사를 선임하여 법적 대응을 준비

관련 자료 제출

- 교육·점검 기록
- 근로 계약서
- 작업지시서
- 위험성평가 문서

□ 외국인 근로자 관련 사고는 통역 입회



③ 재발방지대책 제출

1

안전보건관리 규정 정비

: 기존 규정을 점검하고 미비점을 보완

2

예산·인력 확보 계획

: 안전 투자를 위한 구체적인 예산 계획 수립

3

기계 교체·보수 계획

: 노후 기계를 교체하고 안전장치를 보완

06 사업주 체크리스트

① 근로자 관련

- 근로계약서 체결
모든 근로자와 서면 근로계약을 체결 – 위반 시 형사처벌 대상
-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등록
적법한 절차를 거쳐 외국인 근로자 고용 – 위반 시 형사처벌 대상
- 정기 안전교육 기록 보관
분기별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일지를 보관
- 작업지시서 유지
작업별 안전 지시사항 문서화 및 비치



② 시설 · 기계

- 농기계 방호장치 점검
- 사다리·발판 고정
- 비닐하우스 전기안전 점검
- 축사·저장조 환기장치 정상 작동 확인

③ 관리체계

1

위험성 평가 연 1회 실시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사항으로 반드시 실시하고 기록을 보관

2

안전보건담당 지정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사업장은 안전보건담당자를 반드시 지정해야 함

3

작업 전 점검 체크리스트 운영

매일 또는 작업 시작 전 점검표를 작성하고 기록을 보관

4

사고·고장 즉시 보고 체계

문제 발생 시 즉시 보고하고 작업을 중지하는 체계를 구축



형사법상 처벌규정의 이해

- 형사법상 처벌규정이 존재하는지, 규정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것 어려움
- 처벌규정은 해석의 여지가 있는 경우가 많음

과실범 처벌

- 산안법이나 중대재해법은 고의범이 아닌 과실범 처벌규정
- 실제로는 무과실 책임처럼 운용

교육과 기록의 중요성

- 교육을 실시하고 그 자료를 보존하는 것이 중요

전문가 자문

사건 발생 시 즉시 변호사에게 자문 ►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함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건의 전체 형사절차 개요

초기 대응

01

산업재해 발생

사망사고 또는 중상해(전치 3개월 이상) 발생
시 즉시 조치

02

즉시 조치 사항

119 신고 → 기계 정지 → 현장 보존
순서로 신속하게 대응

03

고용노동부 신고(법적 의무)

산안법 제54조에 따라 사망사고, 전치3개월 중
상해 2명 이상, 부상자·직업성 질병 10명 이상
발생 시 고용노동지청에 보고

❑ 미보고 시 과태료 부과

고용노동부 및 경찰 조사

고용노동부 현장 조사

고용부 조사관이 현장을 방문하여 조사

고용노동부 조사 내용:

- 안전조치·보건조치 불이행 여부
- 위험성평가 시행 여부
- 교육 기록 및 작업지시·점검 체계
- 기계·설비 관리 상태
- 사업주 관리·감독의 상당성
- 외국인 근로자 교육·통역 여부

- 현장사진 촬영, 관계자 면담, 사업주 진술, 서류 제출 요구 등의 방식으로 조사 진행
- 불송치(불기소), 송치 의견 정리

경찰 수사

고용부 조사와 병행

- 적용 법률 :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상)와 산안법을 동시 적용

경찰 조사 내용:

- 사업주의 안전조치 의무 위반 여부
- 교육 미 실시 여부
- 현장 관리 감독의 부실 여부
- 근로자의 과실 여부

- 일반적으로 사업주는 피의자 신분
- 불송치(불기소), 송치 의견 정리

검찰 송치 및 수사 단계



검찰 송치

경찰과 노동청 조사관이 사건을 정리하여 검찰로 송치



검찰 추가 조사

검찰이 사건을 검토하고 필요시 추가 조사를 진행



검찰 처분

기소, 약식기소, 기소유예, 불기소 결정

기소

정식재판으로 넘어가는 경우

약식기소

벌금형으로 처리되는 경우

기소유예

기소를 유예하는 경우

불기소

혐의 없음으로 종결되는 경우

법원 형사재판 및 최종 판결

기소 또는 약식기소된 경우 법원의 형사재판 절차 진행 → 법원 : 과실 유무를 판단, 최종 판결(유죄/무죄/감형)



벌금형

금전적 처벌로 종결



집행유예

징역형이지만 집행을 유예



징역형 실행

실제 수감되는 형벌



무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자주 묻는 질문 / Q&A

Q: 상시근로자 5인 미만 농장도 산안법이 적용되나요?

A: 네, 산업안전보건법은 1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다만 중대재해처벌법은 5인 이상만 적용됩니다.

Q: 외국인 근로자 교육은 어떻게 하나요?

A: 통역을 준비하거나 모국어로 된 교육 자료를 활용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에서 다국어 교육 자료를 제공합니다.

Q: 위험성 평가는 얼마나 복잡한가요?

A: 소규모 사업장은 간소화된 양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A4 5~8장 정도면 충분하며, 고용노동부 안내서를 참고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